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통권 129호) 2022. 6. 107~136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2.36.2.107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Jeollanam-do

김 지 영**·박 재 희***
Kim, Jiyoung·Park, Jaehee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협조 및 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력 및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를 참여 영향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7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2. 5. 16. 심사기간: 2022. 5. 16. ~ 2022. 6. 8. 게재확정일: 2022. 6. 8.

석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순으로 해당 요인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실제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해당 치안서비스의 수용도가 낮아 직접적인 참여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환경설계 및 효과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한다.

□ 주제어: 자치경찰, 주민참여, 지역사회 치안활동, 공동생산이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라남도 자치경찰제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local residents are expected to co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system, not a passive beneficiary. While resident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s essential for the settl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ctu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is low.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autonomous police system activitie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production and Community policing, awareness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perceived regional safety, and satisfaction with police activities were conceptualized as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more relevant factors were secured in the order of resident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atisfaction with police activities in transportation, perceived regional safe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wareness of the system, the more the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creases. But the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activ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was found to decrease participation.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are limited, general residents will not take direct participatory actions due to the low acceptance of the security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courag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system, promoting the system, actively utilizing local communities, designing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local safety, and providing participation incentives at satisfactory level.

□ Keywords: Autonomous Police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Policing, Co-productio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eollanam-do Autonomous Police System

Ⅰ. 서론

자치경찰제도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출발하여 6.25 전쟁,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권위주의 등을 거치며 대륙법계 법제에 바탕을 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행정자치부, 2008: 29). 그 결과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상열·전준석, 2008).

이러한 기존 경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패하였으나, 2021년에 들어 지역에 맞춤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국가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안행정의 성공적인 지방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광현 외, 2020). 주민들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주요 의결 주체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특정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이상열·남재성, 2018; 박동균·이행준, 2020; 김원중, 2021; 배미란, 2021).

또한 경찰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결을 같이 한다. 즉,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과 주민들의 적극적 활동과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연대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박동균·이행준, 2020; 김영식·황의갑, 2021; 배미란, 2021). 즉,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관점이 치안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단계에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1] 이는 자치경찰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1) 세계일보. '"자치경찰제가 뭐죠?"… 주민 인지도 저조' 2021.08.31.
(http://www.segye.com/newsView/20210830512480?OutUrl=naver)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와 관심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며 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치안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실제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행정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다(박동균·이행준, 2020; 김영식·황의갑, 2021). 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참여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과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공공의 문제이다(허용훈·문유석, 2007; 이승주, 2012; 라광현 외, 2020; 김영식·황의갑, 2021; 배미란, 202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자치경찰제도는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배미란, 2021). 그럼에도 저조한 참여와 무관심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을 참여로 유도하고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전라남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범죄 위험성이 나타나며 이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리는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맥락으로 이어진다.[2]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운영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KBS. '자치경찰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는?'. 2021.10.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5996&ref=A)

2) 뉴시스. '전남 영광 폐가서 2년 전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경찰 수사'. 2019.02.18.
(http://www.nocutnews.co.kr/news/5106177)
동아일보. '신안 염전 섬노예, 5년만에 극적 탈출…'일자리 준다' 속여 착취'. 2014.02.0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207/60653116/1)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자치경찰제도와 주민참여

1)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주민참여 관점에서

기존의 경찰제도는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경찰제도로서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수행해 왔다. 국가경찰제도는 전국 공통의 조직체로서 통일적, 신속적,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 제도이다(조강원, 200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민 혹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허용훈·문유석, 2014; 배미란, 2021).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집중화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증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경찰활동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의 필요성이 나타났다(라광현 외, 2020).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 시행된 것을 기반으로 2020년 8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1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전국 시도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질서유지, 범죄 예방 및 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 경찰제도가 수행하지 못한 근린단위 수준인 지역사회의 치안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광현 외, 2020; 배미란, 2021).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활동, 생활안전, 지역경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업무가 수행되는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안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허용훈·문유석, 2007; 이재영·최응렬, 2010; 이상열·남재성, 2018; 박동균·이행준, 2020; 김원중, 2021; 배미란, 2021). 따라서 기존 국가경찰제도 하의

주민들은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의 성격이 강했다면,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들은 '수혜자'이자 동시에 치안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주민 역할의 변화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민들과 경찰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지역사회 치안문제의 해결 및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광현 외, 2020).

결국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공공 무질서를 개선하며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과 결을 같이한다. 지역사회 치안활동이란 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직접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참여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정의된다(Pattavina et al., 2006; Kappeler and Gaines, 2012; Choi and Lee, 2016; 이재영·최응렬, 2010; 김영식·황의갑, 2021). 다시 말해, 자치경찰제도는 정부의 단일 노력이 아닌 지역단위의 자원을 활용하고 민관의 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치안활동 과정이다.

2) 지역사회 치안활동과 공동생산이론

해당 지역사회 치안활동 이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역사회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부, 경찰, 그리고 주민의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 이때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공공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 집단이다. 이는 곧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 치안활동의 논의와 동일하게 전통적인 경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참여와 경찰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치안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결국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산자(Co-production)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Pattavina et al., 2006; 송건섭·김상길, 2003; 허용훈·문유석, 2014; 홍태경, 2017; 라광현 외, 2020). 일반적으로 공동생산은 최광의의 주민참여로 개념화되는바, 공공영역 행위자와 협력하여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고안해내고 제공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참여활동으로 정의된다(이승종·김혜정, 2018). 이는 실제 이들이 공공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재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로서 설명된다. 상술하였듯이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주민은 기존 국가중심의 집중화된 경찰제도 하에서 단순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받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역할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는 공동생산의 개념이 치안행정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송건섭·김상길, 2003; 이재영·최응렬, 2010), 이를 통해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소유하지 못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받을 수 있고 경찰 및 지역사회 행위자들의 신뢰와 유대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송건섭·김상길, 2003; 허용훈·문유석, 2014; 라광현 외, 2020).

이처럼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봉규·박경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간담회 참석 등으로 대표되는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가 해당 참여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연구를 통해 실제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경험이 없는 주민들에 비해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사하게 이승주(2012) 역시 경찰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방식이 한정적이고 실제 참여수준이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이상열·남재성(2018)의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치경찰제 관련 주민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라광현 외(2020)의 연구 역시 자치경찰제도 하에 주민들이 갖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긍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약하면 자치경찰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치안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경찰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력을 보충하고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들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는 현행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달성하기 위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2.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참여 영향요인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 중요성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향요인은 주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인식, 경찰활동 만족도와 거주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접근 가능하다. 이는 제도, 서비스,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이처럼 본 연구가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에 집중하는 까닭은 실제 참여를 수행하는 주체인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인 인식에 따라 참여의 정도와 성격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승종·김혜정, 2018).

1) 자치경찰제도 인식: 인지도, 효과성

주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 혹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보하게 되면 그들의 참여의지는 강화될 것이다(이재완, 2014). 즉,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주요 쟁점을 알고 있고 제도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김영오, 2003).

이와 관련해 김명수(2017)는 주민참여와 경찰 인력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참여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승주(2012)의 연구에서도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수준이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참여자로 기대되는 행위자들이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연구는 치안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성 인식은 실제 해당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효과성 인식의 유무가 실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여러 참여행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 내지 치안활동에 대한 개인의 효과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이 치안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김영오, 2003; 이진아·황의갑, 2009).

2) 경찰활동 만족도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현승숙·이승종, 2009). 따라서 참여자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가진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경찰제 하에 이루어지는 치안활동 관련 참여 수준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치안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해 주민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의 수준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 및 긍정적인 인식이 확보될수록 주민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논의된다(Pattavina et al., 2006; 김영오, 2003; 허용훈·문유석, 2014; 이상훈·김순석, 2017). 이와 관련하여 Pattavina et al.(2006)은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작동하는 주요 기제는 경찰과 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파트너십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경찰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족스러운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확보하게 되고(홍태경·윤우석, 2017) 이러한 유대감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윤우석·최응렬, 2008).

이와 관련하여 전준하·최응렬(2021)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서나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접촉 경험이 많아 순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예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허용훈·문유석(2014)의 연구에서도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개방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주민들과의 협조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홍태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순찰이나 방범활동과 같은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치안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 안전성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안전성은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Choi and Lee, 2016; 허용훈·문유석, 2014; 이상훈·김순석, 2017; 홍태경·윤우석, 2017; 전준하·최응렬, 2021).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영향의 방향성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최재국·문국경(2021)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범죄 두려움,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활동을 촉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상훈·김순석(2017)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범죄발생 등 안전성과 관련된 무질서 정도는 범죄예방 활동을 약화시키며 특히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무질서의 정도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무질서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수록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치안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존재한다(홍태경·윤우석, 2017). 이와 관련하여 Choi and Lee(2016)는 커뮤니티 내 범죄 문제가 빈번할수록 이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연쇄적으로 안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한다. 유사하게 전준하·최응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들의 순찰 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참여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최응렬(2010) 역시 범죄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려는 의지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실제 주민이 느끼는 근린 지역 환경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범죄예방과 관련된 참여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안전성 수준이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하게 논의된다는 점에서 핵심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으로서 인지도와 효과성, 경찰활동 만족도, 지역 안전성이 실제 자치경찰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대다수 인식조사에 그쳤거나(제갈욱·제갈돈, 2008; 이상열·남재성, 2018; 김상호, 2019; 라광현 외, 2020) 혹은 참여 요인을 광범위한 치안활동의 내용 안에서만 탐색하고(허용훈·문유석 2007; 이재영·최응렬, 2010), 새롭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사무와 연결하여 참여 요인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타 도시정책이나 시민참여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자치경찰제의 법정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변수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기본적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구체화되는바, 지역의 안전성 수준과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을 세부적인 사업 구분의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것은 기존 치안활동 정책과 차별화된 자치경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주민참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치안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역특성 요인이나 경찰관과 관련된 요인 등을 주목하였으나(이재영·최응렬, 2010; 허용훈·문유석, 2014)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관련된 요인에 중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에 따라 실제 참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이승종·김혜정, 2018). 상기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자치경찰제도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H2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H3 경찰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H4 지역 안전성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3. 제도적 배경: 전라남도 자치경찰제 개관

전라남도의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경찰의 임무는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전·교통 및 지역경비·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수사 등에 관한 사무 등을 포함한다. 동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자치경찰의 사무는 조례에 구체화되어 있다. 2021년 5월에 제정된「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사무의 범위가 생활안전·교통·경비 총 3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활동,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보호 활동, 지역 내 교통활동 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더불어 고령화 및 1인 가구 어르신이 증가하는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 대책'을 자치경찰 1호 시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전라남도 지역의 주민참여조직은 역할에 따라 크게 생활안전 협력단체와 교통안전 협력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는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가 해당되며 교통안전 분야에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다. 해당 협력단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첫째, 전남지역의 자율방범대는 347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총 7,672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있다. 주된 활동 내용으로는 위험지역 야간순찰, 위기 어르신 발굴·지원,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지역안전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다.[3] 둘째, 지역사회의 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생

3) 전라남도 지역 내 자율방범대의 최근 주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영광군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안전한 낙월만들기'를 표방하여 치안활동을 전개하였으며(영광군민신문, 2021.03.08.), 광양시 진상면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역공동체 협력 활동 일환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광양시민신문, 2021.09.05.). 또한 함평군 자율방범대는 함평경찰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 어르신의 안전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안전순찰' 및 '안전환경 조성'등을 수행하였다(데일리한국, 2021.09.03.).

활안전협의회는 현재 187개 조직, 총 2,8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협력단체를 살펴보면,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사회의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 주민들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며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한다. 전남지역 모범운전자회는 637명의 활동가가 있으며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를 체결해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유관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홍보, 도민 의견 수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을 도모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147개 학교 14,07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수지역 녹색어머니회가 43개 학교의 3,086명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남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자체·전라남도경찰청·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한 전남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전라남도 보도자료, 2021).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전라남도 자치경찰제도 요약

구분		내용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무		생활안전·교통·경비
운영	자치경찰 위원회	2과(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 5팀(운영팀, 인사관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인권감시팀) 25명(도 전보 인력 22명, 도경찰청 파견 인력 3명)
	주민참여조직	생활안전 협력단체(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교통안전 협력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Ⅲ.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연구'의 설문조사이다. 해당 설문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목적하에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약 15일 동안 구글 서

베이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연구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지역에 해당하며 본 연구 대상은 해당 설문조사를 완료한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70세 이상까지의 2,178명의 지역 주민들이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Stata/MP 16.0을 활용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종속변수인 '자치경찰 치안활동 참여의지'의 경우 응답지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성질을 갖고 있으나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이 아닌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변수들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선형 관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앞선 분석들을 기반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한 자치경찰제도의 주민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2. 활용변수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경우, 주민참여를 나타내는 '자치경찰 치안활동 참여의지'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관심 없다'의 응답을 기반으로 참여의지 수준에 따라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해당 측정방식은 참여의 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거에 기반한다.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참여수준을 구분한 Zimmerman(1986)의 연구를 참고하면 참여자로 기대되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하여 참여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적극적 참여(Active form)와 이와 대조적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동적 참여(Passive form)로 구분된다. 더불어 현실에서는 비참여 주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비참여(Non-participation) 항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실제 설문을 수행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의지를 응답함에 있어 정보의 구분점을 3점 척도로 구성하여 문항에 대한 응답의 배타성과 선택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 활용변수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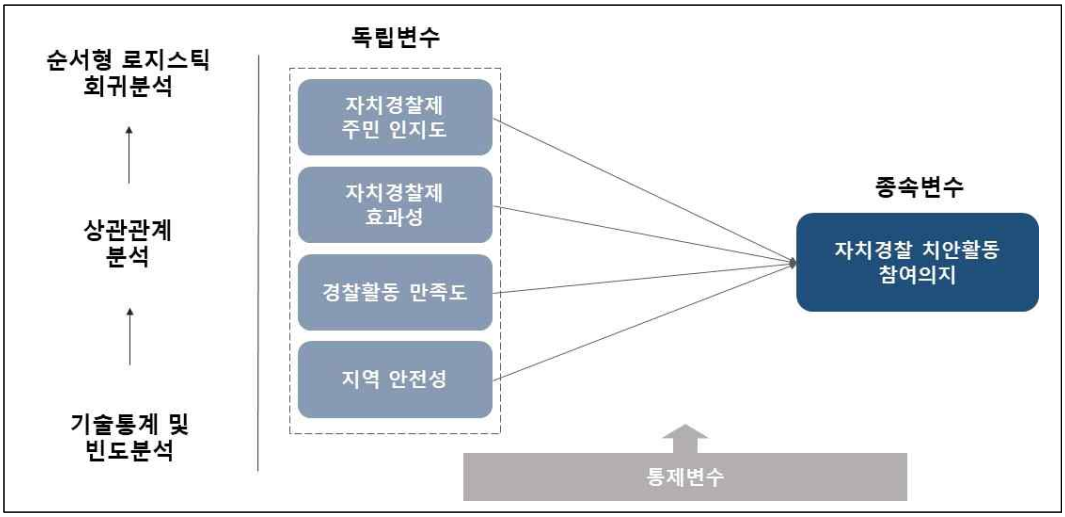
변수	내용		설문	측정
종속변수	자치경찰 치안활동 참여의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관심없다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적극 참여하겠다
독립변수	자치경찰제 주민 인지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 ⑤ 매우 잘 안다
	자치경찰제 주민 효과성 인식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경찰활동 만족도	범죄 및 생활안전 활동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교통안전 활동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역 안전성	범죄안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하다 ~ ⑤ 매우 안전하다
		교통안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 안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1), 남(=2)
			연령	① 만 19세 이하 ~ ⑦ 만 70세 이상
			직업	없음(=1), 있음(=2)
			지역	도심권(=1), 비도심권(=2)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효과성 인식, 경찰활동 만족도, 지역 안전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치경찰제 주민 인지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 전혀 모른다 ~ ⑤ 매우 잘 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경찰제 주민 효과성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효과성이 아닌 집합적 차원의 효과성으로 주목하는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활동 만족도와 관련한 변수로는 세부 자치경찰 활동의 내용에 기반하여 범죄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해당 전라남도 지역의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사무가 생활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지역 교통치안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의 3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반하였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은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로 한다. 지역 안전성 역시 세부 활동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범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측정은 '① 매우 불안하다'부터 '⑤ 매우 안전하다'로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 시간을 더욱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설명한다(김흥순·원준혁, 2013; 이재완, 2014; 이인숙, 201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에 남성의 참여율이 높다고 밝히기도 하였다(곽현근·유현숙, 2005; 양덕순·강영순. 2008; 김혜정, 2012). 이처럼 성별이 참여에 주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연령과 관련하여 참여자로 예상되는 연령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이다. 이들은 여타 연령층과 다르게 오피니언 리더로 가장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나는 연령대로 대표된다(Putnam, 2000; 양덕순·강영순, 2008). 또한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을 소유한 개인일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높고 정치적 자원 및 사회자본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설명된다(Putnam, 2000; 이인숙, 2015).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심권(도시중심 및 주변 지역)과 비도심권(농촌·산촌·도서·공장 및 기타 지역)에서 참여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성별(여= 1, 남= 2), 연령(① 만 19세 이하 ~ ⑦ 만 70세 이상), 직업(없음= 1, 있음= 2), 거주지역(도심권= 1, 비도심권= 2)을 통제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활용변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의 틀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으로 탐색한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 요인들의 실증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설문 응답자들의 표본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변수들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지는 '관심없다',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적극 참여하겠다'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응답의 평균은 2.20점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살펴보면 '적극 참여하겠다' 응답이 30.9%,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응답이 58.5%, '관심없다' 응답이 10.6%으로 나타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에 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중간 수준 이상의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89점으로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785명, 약 36.0%) 알거나 매우 잘 안

다(653명, 약 29.9%)는 응답자의 수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만큼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치경찰제 효과성의 경우 평균 3.55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총 1,139명(약 52.3%)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효과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 다수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치안이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경찰활동 만족도 요인의 경우, 첫째, 범죄 및 생활안전 활동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959명, 44.1%)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497명, 22.8%)보다 약 2배 정도 높아 경찰에 대한 응답자 주민들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교통활동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범죄 및 생활안전 활동 만족도와 유사하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959명, 44.1%)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853명, 39.2%)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의 경우, 평균 3.22점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756명, 34.8%)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431명, 19.8%)보다 높게 도출되었으나 앞선 범죄 및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및 교통활동 만족도에 비해 만족도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 안전성 요인이다.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1,071명, 49.2%)이 불안 혹은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426명, 19.6%)보다 많아 비교적 범죄 안전성 인식이 높다고 확인된다. 교통 안전성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안전성에 대한 응답이 평균 3.18점으로 응답자의 약 37.9%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회적 약자 안전성은 평균 3.23점으로 응답자의 약 35.9%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는 안전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지역 안전성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범죄 안전성, 사회적 약자 안전성, 교통 안전성 순으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1,035명, 47.5%)과 남성(1,143명, 52.5%)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연령의 경우에는 40대(873명, 40.1%), 50대(522명, 24.0%), 30대(468명, 21.5%)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직업은 무직(410명, 18.8%)에 비해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1,768명, 81.2%)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도심권(945명, 43.4%), 비도심권(1,233명, 56.6%)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3〉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결과표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차	빈도분석 요약[4]
독립변수	인지도		1.0	5.0	2.89	1.24	모른다 : 785명, 36.0% 안다 : 653명, 29.9%
	효과성		1.0	5.0	3.55	1.15	도움 되지 않는다 : 349명, 16.0% 도움 된다 : 1,139명, 52.3%
	경찰활동 만족도	범죄 및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1.0	5.0	3.35	1.15	불만족한다 : 497명, 22.8% 만족한다 : 959명, 44.1%
		교통활동 만족도	1.0	5.0	3.25	1.11	불만족한다 : 853명, 39.2% 만족한다 : 959명, 44.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1.0	5.0	3.22	0.99	불만족한다 : 431명, 19.8% 만족한다 : 756명, 34.8%
	지역 안전성	범죄 안전성	1.0	5.0	3.43	1.11	불안하다 : 426명, 19.6% 안전하다 : 1,071명, 49.2%
		교통 안전성	1.0	5.0	3.18	1.10	불안하다 : 559명, 25.7% 안전하다 : 824명, 37.9%
		사회적 약자 안전성	1.0	5.0	3.23	0.97	불안하다 : 426명, 19.6% 안전하다 : 782명, 35.9%
통제변수	성별		1.0	2.0	1.52	0.49	여성 : 1,035명, 47.5% 남성 : 1,143명, 52.5%
	연령		1.0	7.0	3.99	1.08	10대: 39명, 1.8% 20대: 133명, 6.1% 30대: 468명, 21.5% 40대: 873명, 40.1% 50대: 522명, 24.0% 60대: 118명, 5.4% 70대 이상: 25명, 1.1%
	직업		1.0	2.0	1.81	0.39	직업 없음 : 410명, 18.8% 직업 있음 : 1,768명, 81.2%
	지역		1.0	2.0	1.43	0.49	도심권 : 945명, 43.4% 비도심권 : 1,233명, 56.6%
종속변수	치안활동 참여(순서형)		1.0	3.0	2.20	0.61	적극 참여하겠다: 30.9%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58.5% 관심없다: 10.6%

4)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1점부터 5점까지 구성되어있으나, 빈도분석 상에서는 보통(3점)을 제외한 불만족 응답(1점, 2점)과 만족 응답(4점, 5점)인 이분형 응답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 간 선형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을 상관계수를 통해 두 변수 간 상관도를 다음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8 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지적되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두 변수는 독립적이라고 해석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효과성-교통 안전성(.040), 효과성-사회적 약자 안전(.031)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 간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들은 모두 0.8 미만으로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배병렬, 2002). 해당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 간 선형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표 4〉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인지도	1							
효과성	.349**	1						
범죄 안전성	.194**	.045*	1					
교통 안전성	.203**	.040	.464**	1				
사회적 약자 안전성	.244**	.031	.494**	.537**	1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243**	.050*	.719**	.472**	.490**	1		
교통안전 활동 만족도	.271**	.079**	.498**	.694**	.572**	.588**	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282**	.065**	.498**	.544**	.780**	.569**	.671**	1

*p〈0.05, **p〈0.01

3. 자치경찰제도 주민참여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효과성(odds = 1.573), 교통활동 만족도(odds = 1.240), 사회적 약자 안전성(odds = 1.174),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odds = 1.123)의 영향력 크기의 순서대로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 0.762).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가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로 기대되는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을 때 실제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오, 2003; 이승주, 2012; 하정봉·길종백, 2013; 이재완, 2014; 김명수, 2017).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광역단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바, 아직 제도의 정착이 완전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상열·남재성, 2018; 라광현 외, 2020).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선제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이승주, 2012).

둘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높을수록 주민들은 치안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은 해당 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기제로 하여 실제 참여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기존 논의와 결을 같이한다(김영오, 2003; 이진아·황의갑,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 맞춤형 치안 확보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성 인식은 참여로 이어진다(이진아·황의갑, 2009). 나아가 집합적 차원에서 지역의 치안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면 이들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이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odds ratio	Exp	S.E (Exp)	Z
독립변수	인지도		**1.123*** **	**0.116*** **	0.042	2.74
	효과성		**1.573*** **	**0.453*** **	0.042	10.60
	경찰활동 만족도	범죄 및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1.023	0.023	0.060	0.38
		교통활동 만족도	**1.240*** **	**0.215*** **	0.065	3.30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0.762*** **	**-0.271*** **	0.080	-3.36
	지역 안전성	범죄 안전성	0.915	-0.088	0.059	-1.49
		교통 안전성	0.963	-0.037	0.057	-0.65
		사회적 약자 안전성	**1.174** *	**0.161** *	0.075	2.14
통제변수	성별		**2.862*** **	**1.051*** **	0.107	9.76
	연령		0.970	-0.029	0.043	-0.69
	직업		0.920	-0.082	0.123	-0.67
	지역		**0.816** *	**-0.202** *	0.089	-2.26
N			2,178			
Log likelihood			-1810.1516			
Pseudo R2			0.0907			
LR chi2(12)			361.28***			

**p<0.05 ***p<0.01

해당 결과는 자치경찰제가 기존 경찰제도와는 다르게 지역 주민의 치안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제도적 특징에 기인하여 이들의 참여가 촉발된다는 논리구조를 뒷받침한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제공함에 있다(배미란, 2021). 이는 결국 과거 경찰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게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투영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은 자치경찰제의 민관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여 실제 치안정책 참여활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경찰활동 만족도 요인들 가운데 교통활동 만족도 요인만이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당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치안 유지와 관련한 경찰들의 업무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협력적 태도를 독려한다는 기존 주장(Pattavina et al., 2006; 김영오, 2003; 윤우석·최응렬, 2008; 허용훈·문유석, 2014; 이상훈·김순석, 2017; 홍태경, 2017; 홍태경·윤우석, 2017; 전준하·최응렬, 2021)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여타 요인 가운데 교통 분야에 대한 경찰활동 만족도만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사무 범위 가운데 교통활동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보다 더욱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체감도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교통과 관련된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교통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생치안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이러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보다 직접적인 협력 행동을 촉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활동 참여가 독려 될 수 있음(Pattavina et al., 2006; 윤우석·최응렬, 2008; 홍태경·윤우석, 2017; 김영식·황의갑, 2021)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의 경우 교통활동 만족도와 다르게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치안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 차이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Lowi의 정책분류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접근하면 이는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Lowi, 1964). 재분배정책은 특성상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정책 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정책의 수용성에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Lowi, 1964; 이지은·이재완, 2015). 이에 기반하여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제도 하의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은 아동폭력이나 성폭

력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에서의 피해자 보호, 치매노인과 같은 위기 어르신 발굴 및 보호,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전개된다. 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은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특정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제갈욱·제갈돈, 2008; 홍태경·윤우석, 2017; 배미란, 2021). 이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수혜를 받는 집단이 한정적이며 그 외의 집단의 경우 해당 치안정책과 관련된 만족과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해관계 인식이 비교적 저조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참여자로 기대되는 개인들에게 참여 행위를 통해 확보하게 될 이익 요인은 그들의 참여행태를 결정짓는 주요 기제이다(하정봉·길종백, 2013; 이현수·김재관, 2015; 이승종·김혜정, 2018). 따라서 해당 결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치안 정책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이를 통한 이익이 소수의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특성에 기인하여 일반 주민들은 직접적인 참여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이지은 외, 2020) 그 만족도가 실제 치안활동의 참여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지역 안전성 요인 가운데 사회적 약자 안전성은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앞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다르게 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에 기인하여 도출되었다고 해석된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치안서비스의 경우 특정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방범 cctv, 가로등, 비상벨, 범죄방범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 지역의 치안 인프라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간접적으로 치안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수록 범죄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감, 거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낮아지고 안전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지역사회 내 협력 행위가 활성화된다는 기존 논의(이상훈·김순석, 2017; 최재국·문국경, 2021)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odds = 2.862), 그리고 거주 지역이 도심권일수록(odds = 0.816) 참여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경찰 활동의 참여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경찰 사무가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자치경찰 관련 참여 행위자들도 남성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는 현실과 결을 같이한다.[5)]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주민참여 결정요인 크기를 정리하면 1순위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효과성(odds = 1.573), 2순위는 교통활동 만족도(odds = 1.240), 3순위는 사회적 약자

5) 한겨레. “자치경찰 100일…그들은 누구를 향해 경례하나”. 2021.10.07.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14195.html)

안전성(odds = 1.174)으로 요약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및 기각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H1 자치경찰제도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H2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H3 경찰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가운데 ‘교통안전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가 지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H4 지역 안전성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중에는 ‘사회적 약자 안전성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표 6〉 연구 가설 채택 및 기각

H1	자치경찰제도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H2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H3	경찰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부분채택
H4	지역 안전성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부분채택

V. 결론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다양해지고 치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제도적 차원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어 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안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해당 제도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행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민생치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수혜받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협조에 기반한 참여가 요구된다(이상열·남재성, 2018; 라광현 외, 2020; 박동균·이행준, 2020; 김원중, 2021; 배미란, 2021).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영식·황의갑, 2021; 배미란, 2021).

오늘날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경찰서비스 제공 및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과 경찰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이론적 논의와 결을 같이한다. 더불어 주민들은 경찰과의 상호 협조 및 협력을 기반으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여(송건섭·김상길, 2003; 이재영·최응렬, 2010; 허용훈·문유석, 2014; 이승종·김혜정, 2018; 라광현 외,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지닌 인식적 차원으로 범주화되는바,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경찰활동 만족도, 지역 안전성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장 먼저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영향요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주민들의 자치경찰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치안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응답이 절반 이상(58.5%)의 빈도를 보여 참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기존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제도를 통한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과 같은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참여를 통한 협력 의지가 높다는 논의와 결을 같이한다(이상열·남재성, 2018; 김상호, 2019; 라광현 외, 2020; 배미란, 2021).

나아가 본 연구는 주민들의 참여 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발굴하고자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기반하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순으로 해당 요인들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재확인하였다(김영오, 2003; 윤우석·최응렬, 2008; 이진아·황의갑, 2009; 이승주, 2012; 하정봉·길종백, 2013; 이재완, 2014; 허용훈·문유석, 2014; 김명수, 2017; 이상훈·김순석, 2017; 홍태경·윤우석, 2017; 전준하·최응렬, 2021; 최재국·문국경, 2021). 보다 주목되는 점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만족도의 부(-)의 영향력과 지역의 사회적 약자 안정성의 정(+)의 영향력이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가 낮아지나 지역의 사회적 약자 안전성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지역의 안전성은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지만 실제 공공재로서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정책 수용도를 보이고(Lowi, 1964; 이지은·이재완, 2015) 이는 연쇄적으로 적극적인 참여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리라고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치안활동 및 공동생산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치경찰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근래의 치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인 교류 및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송건섭·김상길, 2003) 공동생산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 즉, 현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들은 공공영역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치안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허용훈·문유석, 2014; 라광현 외, 2020).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자치경찰 제도 관련 치안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은 공공영역 행위자와 함께 협력하여 치안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 및 효과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동생산이론의 논의와 결을 같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및 주민참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이다.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자치경찰제도의 참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인지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바, 무엇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 특히 현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부재하다는 현실에 기반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조직을 자치경찰제에 활용하고 행위자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치안정책 수립과 읍면동장으로의 행정권한 위임 확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실시를 고려해야한다(박재희, 2022). 더불어 이러한 참여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행위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치안활동 참여에는 상호 연결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바, 사회적 통제를 위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확보해야만 하며 이때 참여자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요청된다(Kappeler and Gaines, 2012).

나아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참여 전략을 차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순찰이나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한다면 생활안전 활동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주민 제안 순찰제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혹은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체 등 주민참여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주민참여조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자치경찰 정책 공모사업, 주민자치조직 지원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자치조직 간 MOU체결,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 가운데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서 해당 수요계층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패, 상장, 유니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참여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워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치안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 활동은 각 면사무소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르신 범죄 예방 활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님 마을 방문을 통해 자치경찰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7월 광역수준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현재는 각 시·도에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주요한 정책 행위자들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자치경찰제도 상의 주민참여 조직은 광역 혹은 시군구 단위의 치안협의회나 자치경찰 실무위원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상으로는 자율방범대 조례가 시군구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국가경찰 사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자치경찰 사무의 방향성을 국가차원이 아닌 보다 미시적인 근린 단위 수준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치안과 안전 사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전라남도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탐색한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비단 하나의 지역에서 탐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검증되어 자치경찰제 하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논의를 확장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광역단위 수준의 자치경찰 사례를 탐색하거나 혹은 사례 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활용 변수에 있어서도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하의 주민참여를 일반적인 경찰활동에서의 치안 공동체 참여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치안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철저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참여제도가 보장되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지표인 인식 수준의 변수들만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주민참여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의 확대 및 지역 현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변수활용과 문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논의의 확장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김명수. (2017). 경찰과 소방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 「공공사회연구」, 7(4): 161-191.

김상호. (2019).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석. 「치안정책연구」, 33(3): 103-138.

김영식·황의갑. (2021).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1): 51-68.

김영오. (2003). 지역 주민의 치안서비스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6: 235-254.

김원중. (2021).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 325-353.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김흥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93-111.

라광현·정재훈·정의롬 (202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2): 169-192.

박동균·이행준. (2020). 한국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과제-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5(1): 267-301.

박재희·최인수·전대욱. (2021).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92.

박재희. (2022).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 브리프」, 139.

배미란. (2021).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 123-153.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경.

송건섭·김상길. (200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별 시민평가와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7(4): 233-253.

송봉규·박경민. (2012).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경험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 「경찰학논총」, 7(2): 407-430.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윤우석·최응렬. (2008).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399-440.

이상열·남재성. (201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태도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181-208.

이상열·전준석. (2008).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2): 97-120.

이상훈·김순석. (2017).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194-222.

이승종·김혜정. (2018). 「시민 참여론」. 박영사.

이승주. (2012). 경찰행정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 189-222.

이인숙. (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이재영·최응렬. (2010). 지역 특성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연구」, 10(3): 105-130.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이지은·이승종·이혜림. (2020).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1): 7-37.

이진아·황의갑. (2009).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전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205-228.

이상훈·김순석. (2017).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193-222.

이현수·김재관. (2015). 지역공공개발사업 주민참여 영향요인 분석-전북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89-110.

제갈욱·제갈돈. (2008).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범죄통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367-397.

전준하·최응렬. (2021). 주민의 순찰활동인식이 범죄예방활동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23(2): 119-154.

조강원 (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5): 35-73.

최재국·문국경. (2021).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77-95.
하정봉·길종백. (2013).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249-274.
허용훈·문유석 (2007).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93-222.
허용훈·문유석. (2014).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실태와 영향요인: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143-163.
현승숙·이승종. (2009). 주민의 공직자접촉에 대한 영향요인: 주민대표의 공공서비스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237-260.
홍태경. (2017).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경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215-242.
홍태경·윤우석. (2017).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치안행정논집」, 13(4): 179-207.
행정자치부. (2008).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Choi, K., and Lee, J. L. (2016).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safety: a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policing in South Korea and the UK. *Policing and society*, 26(2): 165-184.
Kappeler, V. E., and Gaines, L. K. (2012).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Routledge.
Lowi, T.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4): 677-715.
Pattavina, A., Byrne, J. M., and Garcia, L. (2006). An examination of citizen involvement in crime prevention in high-risk versus low-to moderate-risk neighborhoods. *Crime & Delinquency*, 52(2): 203-231.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ulture an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23-234.
Zimmerman, M. A. (1986).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동아일보. (2014.02.07.). 신안 염전 섬노예, 5년만에 극적 탈출…'일자리 준다' 속여 착취.
뉴시스. (2019.02.18.). 전남 영광 폐가서 2년 전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경찰 수사.
영광국민신문. (2021.03.08.). 청정낙월지킴이 낙월면 자율방범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

원 영광군에 기탁.
세계일보. (2021.08.31.). “자치경찰제가 뭐죠?”… 주민 인지도 저조.
데일리한국. (2021.09.03.). 전남 함평경찰, ‘위기 어르신’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앞장.
광양시민신문. (2021.09.05.). 광양경찰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국민일보. (2021.10.05.). 7년 일하고 받은 돈 400만원…신안 염전 노동자 호소.
KBS. (2021.10.07.). 자치경찰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는?.
한겨레. (2021.10.07.). 자치경찰 100일…그들은 누구를 향해 경례하나.
뉴스원. (2021.11.01.). 또 염전노예?..신안군, 장애인 임금착취 사건에 한숨 ‘푹푹’.

김 지 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과정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등이다. 연구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 비참여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21), “공공임대주택 거주민과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 주거요인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charlet318@skku.edu).

박 재 희: 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제목: 미국 주립대학교 교수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연구, 2015)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행정체제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거버넌스 등이고, 최근 논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2022),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22),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2021) 등이 있다(jpark@krila.re.kr).